

해설 내용은 개정된 법령(2023. 10월 기준)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지방자치론 자료 및 질문은 네이버카페 '김재준 행정학' 및 유튜브 '김재준 지방자치론TV'를 이용해 주세요.

문 1. 지방자치의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성을 강조한다.
- ②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국가에 의해 부여된 권리로 받아들인다.
- ③ 단체자치는 국가의 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구분하지 않는다.
- ④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의 법률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, 주민자치는 주민참여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다.

문 2. 지방정부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단층제는 중층제에 비해 업무에 대한 행정책임이 명확하다.
- ② 단층제는 중층제에 비해 정부 간 보고체계에 따른 행정의 지연을 줄일 수 있다.
- ③ 중층제는 단층제에 비해 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업에 불리하다.
- ④ 중층제는 단층제에 비해 의사소통 내용의 왜곡이 발생하기 쉽다.

문 3.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된 것이 아닌 것은?

- ①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- ②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- ③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- ④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

문 4.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의결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- ④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발의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. ③

· 주민자치는 국가의 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구분하지 않는다.

2. ③

· 단층제는 중층제에 비해 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업에 불리하다.

정답 및 해설

3. ④

· 지방자치법 제15조(국가사무의 처리 제한):

3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

4. ③

· 지방자치법 제29조(규칙)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(조례 X)을 제정할 수 있다.

- 문 5.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회의원이 퇴직하거나 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의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 변경된 때
 - ②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
 - ③ 주민소환투표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되고 그 결과가 공표된 때
 - ④ 농업협동조합,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에 취임할 때

- 문 6.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지 못한 선결처분은 선결처분을 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

- 문 7. 자치권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딜런의 룰(Dillon's Rule)에 따르면, 지방정부는 미국 주(州) 정부에 의해 명시적으로 위임 받은 권한과 그에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.
 - ② 영국에서 등장한 월권금지 원칙(ultra vires doctrine)에 따르면,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권리로서 지방정부가 행하는 어떠한 활동도 존중되어야 한다.
 - ③ 보충성(subsidiarity)의 원리는 사무배분에 있어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가 우선 처리하고 그렇지 못한 사무는 상위 지방정부나 국가가 단계적으로 보충할 것을 강조한다.
 - ④ 미국의 홈-룰(Home-Rule)은 주(州)의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현장을 만들고 현장에 규정된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.

문 8.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ㄴ. 둘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.
- ㄷ. 구급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통지를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시·군 및 자치구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되 시·도지사를 거쳐야 한다.
- ㄹ.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ㄷ, ㄹ
- ③ ㄱ, ㄴ, ㄷ
- ④ ㄱ, ㄷ, ㄹ

정답 및 해설

5. ①
· 지방자치법 제90조(의원의 퇴직):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.
2.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(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)
6. ④
· 지방자치법 제122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) 제3항: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

정답 및 해설

7. ②
· 영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권 받은 사무에 대해서만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,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.
8. ④
· ㄴ. 둘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시·도지사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.

문 9. 지방예산 편성 및 의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지방의회는 시·도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·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문 10.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문 11.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농어촌특별세
- ② 담배소비세
- ③ 지방소득세
- ④ 자동차세

문 12. 지방재정법상 정부 회계의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과는 별개로 회계·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예약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, 이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- ③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- ④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정답 및 해설

9. ②

· 지방자치법 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제3항: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10. ②

· 지방자치법 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1. ①

·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 해당한다.

12. ②

· 지방재정법 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약) 제1항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약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문 13.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도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운영상 면을 따로 둘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눌 때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.

문 14.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·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하며,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.
-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며, 그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.

문 15. 법령상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시·도는 5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회계·계약 및 재산관리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더라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.
- ③ 주민은 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에 주무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-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·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.

문 16.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신중앙집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지배적·강압적 관계가 아니라 지도적·협동적 관계로 설정한다.
- ② 신지방분권은 절대적·소극적 분권이 아닌 상대적·적극적 분권의 특징을 지닌다.
- ③ 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는 신지방분권화를 촉진했다.
- ④ 미국의 신연방주의(New Federalism)와 프랑스의 코뮌(Commune), 데파르트망(Département) 및 레지옹(Région)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은 신중앙집권의 대표적 사례이다.

정답 및 해설

15. ④

- ① 시·도는 3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
- ② 주민투표법 제7조(주민투표의 대상) 제2항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.
3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가. 예산 편성·의결 및 집행
나. 회계·계약 및 재산관리
- ③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1. 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

16. ④

- 닉슨 행정부와 레이건 행정부는 신연방주의 하에서 주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, 연방의 권한과 역할을 줄이고자 하였다. 프랑스의 코뮌, 데파르트망 및 레지옹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법이다.

정답 및 해설

13. ①

- 지방자치법 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제3항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「주민투표법」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

14. ④

- 지방자치법 제209조(해산) 제1항: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.

문 17.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역 간 균형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.
-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,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이 된다.
- ④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지원단을 둔다.

문 18. 정부 간 관계에 관한 엘코크(Elcock) 또는 로즈(Rhodes)의 대리인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술적·재정적 지원에 의존한다.
- ㄴ. 중앙정부의 통제에 대한 수용 여부는 지방정부의 재량에 속한다.
- ㄷ. 주요 정책 영역에서 지방의 정치행위자들이 상호 경쟁하고 있음에 주목한다.
- ㄹ. 주요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관료에 의해 발의되고 결정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
- ③ ㄴ, ㄷ ④ ㄴ, ㄹ

문 19.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·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·협력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·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·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·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문 20.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다.
- ② 시·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, 위치, 관할구역, 하부조직, 공무원의 정원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,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④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7. ③

- 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설명이다. 지방자치법 제187조(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·조정) 제1항: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.
- ② 지방자치법 제187조(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·조정) 제3항: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(기획재정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은 당연직 위원).
- ④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(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) 제1항: 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을 둔다.

18. ②

-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완전히 지배·통제하는 형태이다(재량 X, 상호 간 경쟁 X).

정답 및 해설

19. ①

- 지방자치법 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제1항: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·협력

20. ④

-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) 제1항: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없다.